

있다. 규범적 수준에서 외국계 한국인에 대해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생활 속에서는 여전히 폐쇄적이고 협소하게 한국인을 규정하려는 모습도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시점에서 한국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방식은 혈연을 중시하는 전통적 인식과 정치적 정체성 등이 강조되는 근대적인 민족주의적 특성이 공존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혈연적,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남한만의 정치적 정체성이 한국인을 정의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즉 혈연에 기초한 막연하고 애매한 한민족, 한국인이라는 자기정의로부터, 이제는 보다 구체적이면서도 근대적 속성을 함께 내포한 '대한민국 민족주의'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제 2 장

집단정체성, 사회균열, 그리고 정치균열

김민전

1. 들어가는 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최근 들어 한국사회가 자주 던지는 담론이다. 광복 이후 60여 년간 숨가쁘게 달려왔고 그 결과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지게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지금쯤 우리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또한, 한반도는 이데올로기 전쟁의 참화를 겪었던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곳이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탈냉전과 함께 한번쯤 우리를 가다듬어 볼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체성 담론은 차분하게 우리사회를 반추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어느 쪽인가?’라는 편가르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무언중에 어느 쪽이든 정체성의 선택을 강요받고, 또 그것을 밝히도록 강요받는 것이다. 즉, 정체성의 정치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사회는 남남갈등이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사회 각 집단

결국 립셋과 로칸에 따르면, 유럽사회는 근대에 있었던 국가혁명과 산업혁명의 결과 중앙과 지방, 세속정부와 교회, 도시와 농촌,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사회균열이 형성되었고, 이러한 균열축을 따라 정당의 경쟁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이다.²⁾

립셋과 로칸 이후의 사회와 정치의 관계를 주목하는 연구들은 립셋과 로칸의 주장을 증명하거나 반박, 혹은 보다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예컨대, 클럽, 밀러 등(Clubb et al., 1980; Miller, 1977; Ersson, Janda, Lane, 1985)의 연구는 지역, 계층과 같은 전통적 사회균열이 투표결정에서 주요한 요인임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고 있으며³⁾, 로스와 우윈스(Rose and Urwin's, 1969)의 연구는 전후 정당체계의 안정성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보여준다.⁴⁾

그러나 정당체계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립셋과 로칸의 연구와 달리 1970년대부터 서유럽의 정당체계는 적지 않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녹색당은 물론, 좌익자유정당(Left-Libertarian)과 같은 신좌파정당, 프랑스의 국민전선(National Front)과 같은 신우파정당 등 신생정당이 출현하였고, 기존 거대정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유권자가 대폭 증가하였다.

이는 일견 립셋과 로칸의 연구를 부정하는 듯이 보이기도 하였지만, 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정당체계 변화의 원인을 사회구조의 변화에서 찾게됨에 따라 다시 립셋과 로칸의 사회균열이라는 개념에 의존하였다.

2) 립셋과 로칸에 따르면 사회균열은 급속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고착되어(freeze) 있기 때문에 정당체계는 안정성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3) 특히, 어슨·잔더·레인(Ersson, Janda, Lane, 1985)은 16개국 93개의 정당을 분석한 이후 지역이 정당의 지지의 차이를 대부분 설명할 수 있지만, 일정지역 내에서는 계층과 종교의 중요성을 발견하였다.

4) 이들은 17개국 76정당에 대한 지지의 응집력(social cohesion)을 측정하고, 종교와 계층에 기반을 둔 정당이 가장 응집력이 강함을 주장한다.

즉, 사회의 현대화(societal modernization)에 따라 전통적인 집단정체성이 잠식되어 정당체계의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벨(Bell, 1973)과 잉글하트(Inglehart, 1977; 1990)는 현대사회는 제3의 혁명인 후기산업혁명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1·2 혁명에 형성된 정치구도가 재편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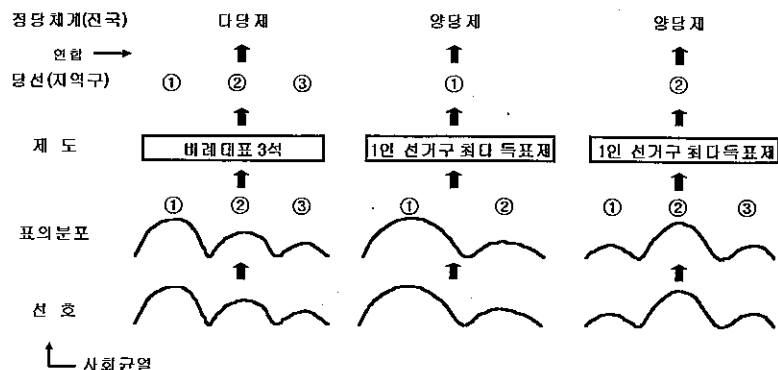
한편, 신제도주의자들은 사회균열구조가 정당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 주목하는데, 쉐보르스키(Przeworski) 등은 사회적 균열이 정치적 균열로 전환되는 데 정치엘리트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엘리트들이 어떠한 정치전략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특정 사회균열이 정치균열로 전환되기도 하며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다.

신제도주의자들에 따르면, 정치엘리트들은 사회균열을 정치균열로 전환시킴에 있어서 제도, 사회구조, 그리고 문화 및 역사적 맥락을 고려해 정치전략을 세우게 된다고 한다. 제도를 예로 들면, 선거제도에 따라 정치엘리트들은 정당의 핵심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수의 대중을 끌어모으는 전략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절대다수제(결선투표제)나 상대다수제(최다득표제)에서는 다수의 대중을 끌어 모으는 캐치 올(catch all)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비례대표제에서는 핵심지지층의 결속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최근의 신제도주의자들은 사회균열이 정치균열로 전환되는 과정을 좀더 정밀하게 밝히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학자로는 콕스(Cox, 1997)를 들 수 있다. 콕스에 따르면 사회균열은 자연상태에서 경쟁하는 정당과 후보자의 수 및 표의 분포를 설명할 수 있지만,

5) 립셋 자신도 최근의 논문에서 전통적인 사회균열 이외에 탈물질주의와 같은 새로운 균열구조가 나타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The Indispensability of Political Parties", *Journal of Democracy* 11.1 (2000), pp. 48~55.

〈그림 2-1〉 콕스의 선호·제도·정당체계의 관계



그 이후 당락을 결정하는 것은 선거제도이다.

콕스는 특히 개별선거구 차원(미시적)에서 선거결과가 모여 전국적 정당체계(거시적 차원)를 이루는 메커니즘의 규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행정부는 전국적 단위에서 선출(대통령제) 혹은 구성(의원내각제)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행정부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연합하는데, 이것이 전국적 단위에서 선거구간 연합을 형성하는 원인이라고 한다.

한편, 다렌도르프(Dahrendorf)와 같은 사회학자는 물론이고 정치학자들도 사회균열구조가 그 사회의 갈등, 혹은 정치적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는데, 대표적으로 래와 테일러(Rae and Taylor)는 한 사회의 주요균열축이 서로 중첩(overlapping)하는지 아니면 서로 교차(crosscutting)하는지에 따라 사회적 갈등의 정도와 정치적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

개인이 여러 집단에 속해 있으면 각 집단으로부터 다른 방향의 압력을 받고 그러한 경우에 개인들은 상호충돌하는 정체성 압력에 의해 덜 공격적이 되는데, 이러한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은 다른 집단에 대한 공격성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상층부를 구성하는 반면, 다른 지역의 거주자들은 경제적 하층부를 구성한다면, 지역과 계층이라는 두 개의 균열축은 서로 강화하는 역할을 해 두 집단 간의 갈등을 증폭시킨다. 그러나 각 지역에 여러 계층이 골고루 존재한다면, 이는 지역균열과 계층균열이 서로 교차하는 것으로 집단간 갈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립셋은 안정적 민주주의의 운영을 위해서는 너무 동질적 집단을 지지자로 하는 정당보다는 다양한 집단의 지지자로 구성된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당이 특정 사회균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에 정당간 갈등이 너무 첨예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3. 개념정의 및 연구의 틀

위에서 간략하게 살펴 본 바와 같이 그간 사회균열이 투표결정 및 정당지지에 미치는 영향(미시적 연구)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사회균열이 정치체제의 안정성 및 정당체계에 미치는 영향(거시적 연구)에 대해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정치세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주요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균열이란 무엇인가' 혹은 '사회균열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아직도 다양한 학문적 견해가 제시되어 있을 뿐 확립된 정의나 측정방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⁶⁾

6) 초기의 연구자들은 사회균열을 사회적 실체로서 특징을 지닌 집단간의 차이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외교정책에 대한 입장차이와 같이 실제적인 집단에 뿌리하지 않는 세계관의 차이 혹은 정책에 대한 입장의 차이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에컨대, 립셋과 로칸은 사회구조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논쟁의 축을 사회적 균열이라고 정의하고 도시와 농촌, 노와 사, 중심과 주변, 종교와 세속국가의 균열축을 제시하는 반면, 엑슈타인(Eckstein, 1966)은 전통적인 사회적 특징의 공유여부로 나누어지는 부문별(segmental) 균열, 세계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문화적 균열, 그리고 구체적 정책의 차이에 의한 균열로 나눈다. 또, 래와 테일러(Rae and Taylor)는 계층, 종교, 언어와 같은 전통적인 사회적 특성(trait) 균열, 정당 및 정책에 대한 지지와 같은 의견(opinion) 균열, 그리고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실제 투표와 같은 행태(behavioral) 균열로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는 그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데, 립셋과 로칸의 사회균열 정의는 립셋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탈물질주의'와 같은 의식이나 세계관에 기반한 균열이 중요한데,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엑스타인, 래, 테일러의 정의는 사회균열을 너무 폭 넓게 정의하여 정치균열의 의미까지 포함함에 따라 어떠한 사회균열은 잠재적 균열로 남아 있고 어떠한 사회적 균열이 정치적 균열로 활성화되는지 그 과정은 생략한 채 모두 사회균열로 치부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사회균열과 정치균열을 분리하고 어떠한 사회적 균열이 정치적 균열로 활성화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또한, 사회균열을 정의함에 있어서는 갈등이 활성화된 균열을 중심으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잠재적 균열까지 모두 포함하고자 하며, 전통적인 사회적 특징에 의한 균열은 물론 세계관이나 의식에 의한 균열까지 모두 포괄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사회적 특성을 공유한 균열로서는 소득수준, 연령, 학력, 성별, 거주지형태, 그리고 거주지역으로 구분하고자 하며, 세계를 바로 보는 시각 및 의식과 관련된 균열로는 이념, 계층의식, 그리고 국가정체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정치적 균열은 정치적으로 활성화된 균열로서 정당 및 정책에 대한

지지와 같은 정치적 태도와 투표결정과 같은 정치적 행위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정치적 태도와 관련된 균열만 고찰할 것이다.⁷⁾

이와 같은 사회균열과 정치균열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사회균열을 심각하게 판단하는지, 사회균열의 상호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사회균열이 정치균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사회균열의 상호관계는 래와 테일러의 문제의식에 따라 사회균열이 얼마나 상호교차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며, 나아가 사회균열 중 전통적 균열이 세계관 및 의식의 균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2005년 9월 동아시아연구원과 중앙일보가 공동으로 한 달간에 걸쳐 조사한 국민정체성 조사결과 자료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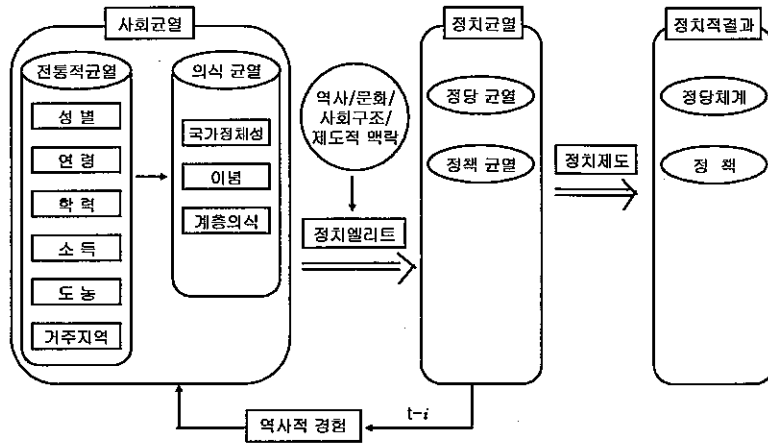
이러한 연구의 틀은 사회균열, 정치균열, 그리고 정치적 결과에 대해 <그림 2-2>와 같은 관계를 전제한 것으로 선행연구들이 제시하는 퍼즐 조각을 맞추어 놓은 것이다.

사회균열은 전통적 사회적 특징에 의한 구분과 세계관 및 의식에 의한 구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사회균열이 정치적으로 활성화되는 데는 그 시대에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가가 중요하지만 정치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어떤 사회균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가에 따라서 논쟁이나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때 정치인의 전략적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정치제도,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 등이다.

정치균열은 정당균열과 정책균열로 형성되는데, 정당균열은 비교적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균열인 반면, 정책균열은 정책적 선호에 의해 형성되는 비교적 단기적이고 변화하기 쉬운 균열이다. 정책균열 가운데에는 정당균열이 반영되는 정책의 정치화(좀더 정확하게 정당화)가 형성되

7) 이 글에서 사용할 실증적 자료는 2005년 9월 동아시아연구원과 중앙일보가 공동조사한 자료인데, 투표행위가 발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한 이후에 조사한 자료이므로 투표행위에 대한 분석은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림 2-2〉 정체성·사회균열 그리고 정치균열



어 있는 균열도 있고 그렇지 않은 균열도 있다.

또한 정치적 균열이 자동적으로 정책이나 정당체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정치제도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정치균열이 정당체제로 전환되기도 하며 그렇지 않기도 하다. 마찬가지로 정책에 대한 선호가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4. 분석

1) 한국사회 균열구조의 특징

(1) 집단간 거리감

사회 각 집단간 거리감 측정결과를 보면, 〈그림 2-3〉에 나타나 있듯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간의 거리감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89.6%)

을 비롯해 기업가와 노동자(76.0%), 정규직과 비정규직(75.2%), 대기업과 중소기업(73.9%) 간의 거리감이 크게 나타나는 등 경제적 차원에 있어서 거리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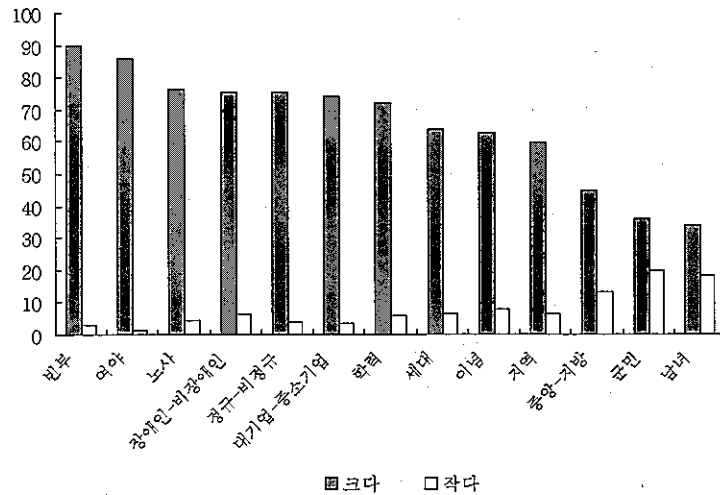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의 거리감은 〈그림 2-4〉에서 보듯이 자신이 중하위 이하의 계층에 속한다고 밝힌 응답자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경기양극화로 중산층이 무너지는 것이 우리사회 전반에 있어 경제적 거리감을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 시사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하위계층 10%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국가전체 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엔 41%였으나 2003년에는 34%로 떨어진 반면, 같은 기간 상위계층 10%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전체 평균소득에서 점유하는 비율은 199%에서 22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스위크》 2006. 1. 23).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따라 2001년 27%에서 2004년에는 37%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했으며(《뉴스위크》 2006. 1. 23),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거리감을 심각하게 느낀다는 점이다. 전통적 사회균열인 노와 사 간에만 사회적 거리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노와 노, 사와 사 간에도 상당한 균열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세계화와 후기산업사회로 특징지을 수 있는 현대 사회의 사회균열이 산업화시기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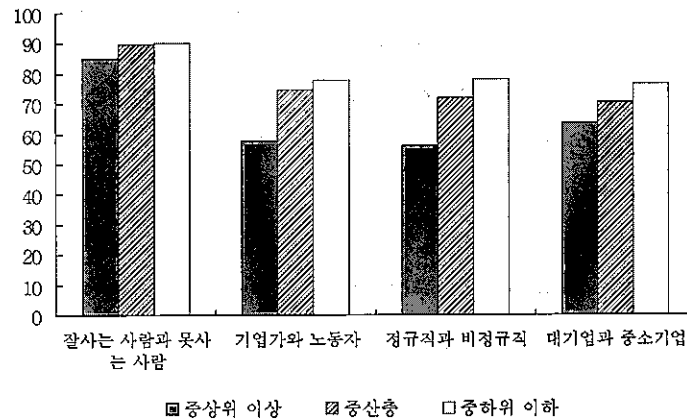
경제적 거리감의 뒤를 잇는 것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거리감(86.0%)이다, 여야가 앞 다투어 상생의 정치를 외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여야가 함께 정권을 담당하자는 연정논란을 벌이기도 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탄핵에서 법사위 점거농성에 이르기까지 사활을 건 여야간 정쟁을 뚜렷이 기억하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과 비장애인(75.4%), 학력(71.8%), 세대(63.5%), 이념(62.8) 간 거리감이 경제적, 정치적 거리감의 뒤를 잇는 반면, 영호남간의 거리감(59.8%)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그림 2-3〉 집단간 거리감 8)



〈그림 2-4〉 계층 의식별 경제적 거리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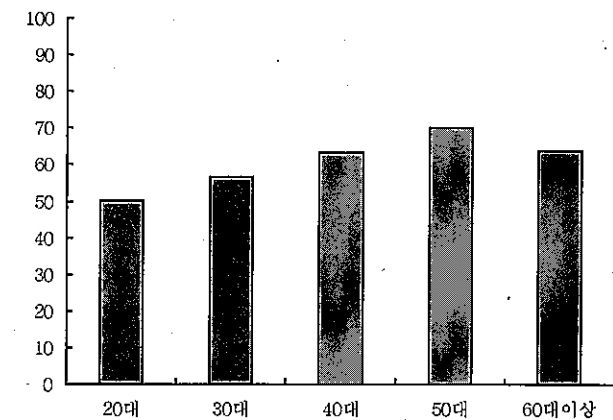
주: 거리감이 '매우 크다' 혹은 '대체로 크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임.

8) '크다'는 '매우 크다'와 '대체로 크다'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더한 것이며, '작다'는 '매우 작다'와 '대체로 작다'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더한 것임.

지역감정이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여겨지지만, 예상과 달리 지역간 거리감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지역감정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영남과 호남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는 정치인들이 실제 이상으로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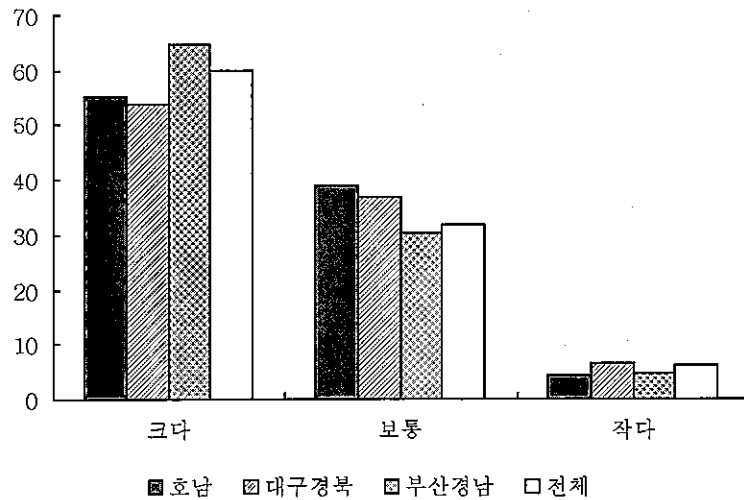
영호남 거리감은 세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데, 50대(70%)가 영호남 거리감이 가장 큰 것에 반해, 40대와 30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대는 50대에 비하여 20%포인트 정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지역감정이 세대를 내려오면서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지역감정의 기원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50대가 정치적으로 성숙한 시기인 박정희와 김대중이 경합했던 1971년 대통령선거부터 지역감정이 부각되기 시작되어 1980년 광주에 이르러 격화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역감정이 정

〈그림 2-5〉 세대별 지역간 거리감



주: 거리감이 '매우 크다' 혹은 '대체로 크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임.

〈그림 2-6〉 지역별 지역간 거리감



주: 거리감이 '매우 크다' 혹은 '대체로 크다'고 느끼는 사람의 비율임.

치적 이유로 발생된 것이며, 아직도 지역구도가 논란이 되는 것은 정치인들이 실제 이상으로 지역감정을 정치적으로 마케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권위주의시대의 주요균열의 축이었던 군과 민간인(35.9%) 간의 거리감, 이제는 사회균열의 축으로서는 의미가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음이 드러났다.

(2) 전통적 사회균열의 상호관계: 중첩 혹은 교차?

사회균열이 중첩되어 있는지 아니면 교차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민주주의의 안정적 운영여부가 영향을 받게 된다는 래와 테일러(Rae and Taylor, 1970)의 주장에 따라 여기서는 우리사회의 균열구조가 얼마나 중첩되어 있는지 혹은 교차되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래와 테일러는 교차의 의미를 한 균열축에 의해 나누어진 집단들 가

운데 같은 집단에 속하는 두 개인이 다른 균열축에 의해 나누어진 집단들 가운데 같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라고 정의하고, 두 개의 균열축이 교차하는 정도를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XC = \sum_{i=1}^m \Pi_i^2 + \sum_{j=1}^n P_j^2 - 2 \sum_{i,j} \Pi_j^2$$

$$F1 = 1 - \sum_{i=1}^m \Pi_i^2$$

$$F2 = 1 - \sum_{j=1}^n P_j^2$$

주: XC = 교차지수, F1 = I 균열의 파편화 지수, F2 = J 균열의 파편화지수.

Π_i = I 균열축에 의해 구분된 각 집단에 속하는 비율.

P_j = J 균열축에 의해 구분된 각 집단에 속하는 비율.

Π_{ij} = I 와 J 균열축이 교차하여 만들어지는 각 집단에 속하는 비율.

출처: Taylor and Rae (1969: 538~539).

래와 테일러가 제시한 공식에 따라 우리사회의 균열축이 얼마나 교차하는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각 집단별분포를 먼저 살펴보자. 전통적 특징을 공유한 집단으로 연령, 학력, 소득, 성별, 거주지구분, 거주지역으로 나누어서 크로스탭을 한 결과, 연령과 학력, 학력과 소득, 연령과 소득, 거주지구분과 소득, 거주지구분과 연령, 거주지구분과 학력, 성별과 학력, 권역과 소득, 권역과 학력의 카이 스퀘어 값이 0.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과 소득이 낮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으며,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학력과 소득은 낮은 반면 연령은 높고, 권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학력과 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연령, 학력, 소득, 거주지구분, 거주지역의 균열이 상당히 중첩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중첩된 균열축 중 몇 가지의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표 2-1〉 연령과 학력 교차분석

(괄호안 단위 : %)

	중졸 이하	고 졸	전문대재 이상	모름/무응답	계
20대	2 (0.9)	49 (22.0)	172 (77.1)	0 (0)	223 (100.0)
30대	3 (1.2)	101 (39.8)	150 (59.1)	0 (0)	254 (100.0)
40대	13 (5.5)	114 (48.3)	109 (46.2)	0 (0)	236 (100.0)
50대	39 (26.7)	76 (52.1)	30 (20.5)	1 (0.7)	146 (100.0)
60대 이상	113 (63.1)	47 (26.3)	19 (10.6)	0 (0)	179 (100.0)
계	170 (16.4)	387 (37.3)	480 (46.2)	1 (0.1)	1,038 (100.0)

〈표 2-1〉에 제시된 연령과 학력의 관계를 보면, 20대의 77.1%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반면, 단 0.9%만이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경우에는 63.1%가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반면, 10.6%만이 전문대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어서 연령과 학력의 균열축이 상당히 중첩된 것을 볼 수 있다.

〈표 2-2〉에 제시된 거주지구분과 소득의 관계를 보면, 대도시 거주자 중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자는 6.3%,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자는 21.2%이지만, 읍면거주자 중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자는 23.8%, 그리고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가진 자는 38.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거주지구분에 따라 소득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2-3〉에 제시된 거주권역과 소득의 관계를 보면, 서울, 인

〈표 2-2〉 거주지구분과 소득 교차분석

(괄호안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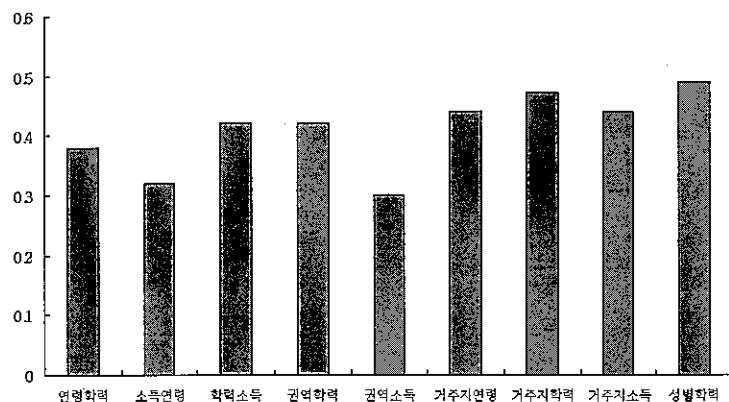
	100만 원 미만	100~ 199만 원	200~ 299만 원	300~ 399만 원	400만 원 이상	모름/ 무응답	계
대도시	31 (6.3)	104 (21.2)	138 (28.2)	123 (25.1)	65 (13.3)	29 (5.9)	490 (100.0)
중소 도시	29 (6.8)	105 (24.6)	130 (30.5)	75 (17.6)	62 (14.6)	25 (5.9)	426 (100.0)
읍/면	29 (23.8)	47 (38.5)	23 (18.9)	10 (8.2)	9 (7.4)	4 (3.3)	122 (100.0)
계	89 (8.6)	256 (24.7)	291 (28.0)	208 (20.0)	136 (13.1)	58 (5.6)	1,038 (100.0)

〈표 2-3〉 권역과 소득 교차분석

(괄호안 단위 : %)

	100만 원 미만	100~ 199만 원	200~ 299만 원	300~ 399만 원	400만 원 이상	모름/ 무응답	계
서울	9 (4.1)	32 (14.6)	61 (27.9)	62 (28.3)	39 (17.8)	16 (7.3)	219 (100.0)
인천/경기	9 (3.2)	46 (16.5)	93 (33.3)	64 (22.9)	45 (16.1)	22 (7.9)	279 (100.0)
대전/충청	17 (16.7)	40 (39.2)	21 (20.6)	9 (8.8)	10 (9.8)	5 (4.9)	102 (100.0)
광주/전라	25 (21.9)	33 (28.9)	26 (22.8)	14 (12.3)	12 (10.5)	4 (3.5)	114 (100.0)
대구/경북	17 (15.6)	36 (33.0)	27 (24.8)	15 (13.8)	10 (9.2)	4 (3.7)	109 (100.0)
부산/울산/ 경남	8 (4.7)	49 (28.8)	54 (31.8)	35 (20.6)	20 (11.8)	4 (2.4)	170 (100.0)
강원/제주	4 (8.9)	20 (44.4)	9 (20.0)	9 (20.0)	0 (0)	3 (6.7)	45 (100.0)
계	89 (8.6)	256 (24.7)	291 (28.0)	208 (20.0)	136 (13.1)	58 (5.6)	1,038 (100.0)

〈그림 2-7〉 전통적 균열의 교차지수



천·경기, 부산·울산·경남의 소득분포가 광주·호남, 대전·충청, 강원·제주의 소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과 소득분포 역시 상당히 중첩된 면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균열축이 중첩되고 있음의 반대개념인 균열축의 교차정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래와 테일러의 공식에 따라 균열축의 교차정도를 계산해 보면, 거주권역과 소득의 교차가 0.30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며, 연령과 학력이 0.38, 학력과 소득 그리고 거주권역과 학력이 0.42, 거주지와 소득이 0.44, 거주지와 학력이 0.47을 나타내며, 성별과 학력이 0.49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다.

이상의 전통적 사회균열축의 중첩과 교차정도의 분석결과를 보면 수도권권과 부산·울산·경남의 중산층 이상과 그 이외 지역의 중산층 이하를 중심으로 하는 갈등의 축이 가장 중첩성은 높고 교차성은 낮게 나타나 정치균열축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의 지역구도와의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인데, 현재의 지역구도가 사회구조적 원인보다는 역사적 경험, 정치인의 마케팅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고학력의 젊은 세대와 저학력의 기성세대와의 균열축 역시 정치적으로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거주지구분별 소득과 학력의 차이가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래와 테일러의 교차지수는 낮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읍·면지역 거주민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70년대 한국정치의 주요 균열축을 구성하던 여촌야도, 즉 농촌과 도시의 균열이 사라진 이유를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3) 전통적 균열과 세계관 균열의 관계

립셋(Lipset) 자신도 인정하듯이, 후기산업사회에 들어서면서 개인은 점점 전통적인 사회적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에서 벗어나 유사한 세계관을 가진 집단에 대해 강한 정체성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치적 태도와 행동 역시 세계관 및 의식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세계관 및 의식과 관련된 정체성을 국가정체성, 이념성향, 그리고 계층의식으로 구분하고, 이들 상호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또 세계관의 균열과 전통적 균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자신이 밝힌 이념성향의 분포를 보자. 0~10의 스케일에서 0~4점을 진보, 5점을 중도, 6~10점을 보수라고 정의할 때, 진보라고 자기의 이념정체성을 규정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32.8%, 중도라고 밝히는 응답자가 39.6%, 그리고 보수라고 밝히는 응답자가 27.6%로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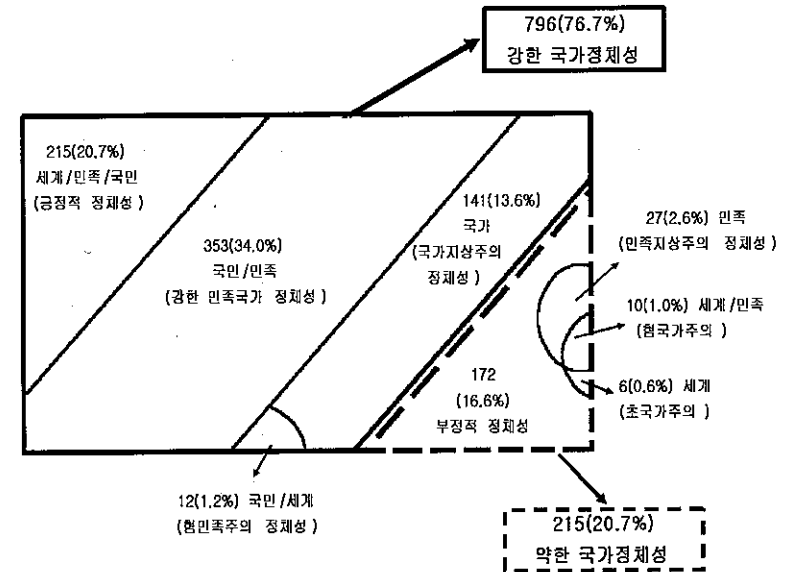
한편, 계층정체성은 최상위계층, 중상위계층, 중산층, 중하위계층, 하위계층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이를 중상위 이상, 중산층, 그리고 중하위 이하로 나누어보면, 중상위 이상은 전체의 3.4%, 중산층은 36.2%, 그리고 중하위 이하로 밝힌 응답자가 58.5%이다.

〈표 2-4〉 이념과 계층의식 크로스탭

(괄호안 단위 : %)

이념 \ 계층의식	4점 이하 (진보)	5점 (중도)	6점 이상 (보수)	계
중상위 이상	9 (25.7)	12 (34.3)	14 (40.0)	35 (100.0)
중산층	141 (37.5)	146 (38.8)	89 (23.7)	376 (100.0)
중하위 이하	183 (30.1)	242 (39.9)	182 (30.0)	607 (100.0)
모름/무응답	7 (35.0)	11 (55.0)	2 (10.0)	20 (100.0)
계	340 (32.8)	411 (39.6)	287 (27.6)	1,038 (100.0)

〈그림 2-8〉 국가정체성 분류



이념적 정체성과 계층정체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중상위 이상이라고 밝힌 응답자들 가운데에서는 보수라고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밝힌 응답자가 40%로 가장 많은 반면,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는 25.7%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중산층이라고 밝힌 응답자들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이념성향을 진보라고 밝힌 응답자가 37.5%로 다른 계층정체성을 가진 이들보다 많이 나타난 반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는 23.7%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계층정체성을 중하위 이하라고 밝힌 응답자들 가운데에서는 자신을 중도라고 밝힌 응답자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렇게 계층의식에 따라 독특한 이념성향의 분포를 보이지만, 계층의식과 이념성향이 선형적 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즉, 계층정체성과 이념정체성이 중첩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국가정체성은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가깝게 혹은 가깝지 않게 느끼는지의 여부로 측정하였다. 매우 혹은 대체로 가깝게 느끼는 경우는 강한 국가정체성, 그리고 별로 혹은 전혀 가깝지 않은 경우는 약한 국가정체성으로 구분하였는데, 강한 국가정체성을 드러낸 응답자는 전체의 76.7%인 반면, 약한 국가정체성을 노출한 응답자는 20.7%로 나타났다.

여기서 잠깐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그리고 세계인정체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은 국가정체성이 민족정체성(63.9%)이나 세계인정체성(27.1%)보다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가정체성과 민족정체성, 그리고 세계인정체성이 상호 긴장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할 정도로 상호 연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즉, 세계인정체성이 강한 이가 민족정체성

이 강하고, 민족정체성이 강한 이가 국가정체성도 강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계인, 민족, 국가 모두에 있어서 강한 정체성을 보인 응답자는 전체의 20.7%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응답자는 전반적으로 거버넌스(governance) 기구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정체성을 가진 응답자로 보인다. 강한 국가정체성과 강한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세계인정체성이 약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4%로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이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자는 대한민국과 한민족에 대해서 강한 정체성을 보이는 경우로 민족국가 정체성이 강한 경우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미미하긴 하지만, 강한 세계인정체성과 강한 국가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민족정체성만 약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1.2%), 이는 최근의 일부 정치세력이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민족중심적 정치수사에 반대하는 경우로 보인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20.7%가 약한 국가정체성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세계인정체성, 민족정체성, 그리고 국가정체성이 모두 약한 부정적 집단정체성을 가진 경우는 전체의 16.6%로 나타났다. 세계인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은 높지만 국가정체성만 약한 경우는 현 국가체제에 대한 불만이 많은 협국가주의로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전체 응답자의 1%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정체성·민족정체성은 모두 약하면서 세계인정체성만 높게 나타나는 응답자는 초국가주의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체의 0.6%가 이러한 유형에 해당한다. 국가정체성과 세계인정체성은 모두 약하면서 민족정체성만 높은 경우는 민족지상주의자로 볼 수 있을 터인데 이들의 수는 전체 응답자의 2.6%로 나타났다.

한편, 이념성향 및 계층의식과 국가정체성, 민족정체성, 그리고 세계인정체성의 관계를 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국가, 민족, 세계인정체성은 이념성향이나 계층의식과는 중

첩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세 지표가 응답자가 가진 세계관의 각기 다른 부분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세계관 및 의식에 의한 정체성과 전통적 집단정체성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표 2-5>는 세계관 정체성과 전통적 정체성 간의 관계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R^2 값이 각각 0.09와 0.02로 이념정체성과 국가정체성에 전통적 집단정체성이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계층정체성 분석의 R^2 은 0.24로 계층의식의 변화량을 사회적 특징으로 상당부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이념성향에 대한 분석을 자세히 보면, 이념성향은 연령과 0.0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과 0.05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이념성향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념성향은 보수화하는 반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진보적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⁹⁾ 또 소득수준과 이념성향은 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념성향은 진보적 성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적이라는 통념과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은 우리사회에 있어서의 ‘이념’이라는 의미는 재분배와 관련된 입장이 아니라 남북관계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정의되는 경향이 있음과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체성은 대한민국과 ‘강한’ 혹은 ‘대체로 가깝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강한 국가정체성(1로 코딩하였고)으로, ‘별로’ 혹은 ‘전혀 가깝지 않

9) 연령을 제외하고 회귀분석을 실시하면 학력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며, 학력과 이념성향은 부(-)의 관계를 나타낸다. 즉, 학력이 높아질수록 이념성향은 진보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학력과 연령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두 변수를 동시에 넣고 분석한 경우에는 연령만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표 2-5〉 전통적 균열과 세계관 균열: 회귀분석

	이념성향	계층의식	국가정체성
성별	-0.07(-0.54)	-0.12(-2.72)**	-0.02(-0.70)
연령	0.03(5.97)**	-0.07(-2.86)**	-0.01(-1.14)
학력	-0.1(-1.13)	-0.12(-3.46)**	-0.02(-0.79)
소득	-0.07(-1.97)*	-0.17(-14.03)**	0.01(1.42)
도농	-0.03(-0.29)	0.05(1.46)	-0.06(-2.76)**
서울경기	-0.03(-0.17)	0.11(1.60)	-0.04(-1.03)
호남	-0.25(-1.04)	0.10(1.13)	-0.01(-0.24)
영남	0.20(1.00)	0.03(0.37)	0.00(0.05)
R ²	0.09	0.24	0.02

*p < 0.05, **p < 0.01.

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약한 국가정체성으로(2로 코딩) 측정했는데, 국가정체성은 거주지의 구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 즉 농촌으로 갈수록 국가정체성이 강한 반면, 대도시로 올수록 국가정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계층의식은 전통적 사회균열의 영향을 상당히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성별, 연령, 학력, 그리고 소득이 모두 0.01 수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계층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자신이 상위계층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우리사회의 계층의식에는 단순히 소득수준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학력수준과 연령까지도 반영한 개념임을 의미한다.

2) 사회균열과 정치균열의 관계

정치균열 중 가장 즉각적이고 또 상당한 지속성을 지닌 균열이 바로 각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간에서 나타나는 집단정체성의 균열인 정당균열이다. 그러나 정당에 대한 지지여부뿐 아니라 특정정책에 대한 찬반여부를 두고 균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균열은 보통 정당균열에 비해 불안정적이고 단기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다. 정당에 대한 지지가 정책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정책에 대한 지지가 그 정책을 옹호하는 정당에 대한 지지로 변화하기도 하지만, 기성정당이 사회가 원하는 이슈에 대하여 침묵하는 경우에는 정당지지와 무관한 정책 지지가 나타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정당균열이 사회균열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사회의 주요 정책적 이슈와 정당균열 및 사회균열은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정당지지와 사회균열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각각 1로 코딩하여 각각에 대해 프로빗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는 〈표 2-6〉에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의 정당균열은 사회균열을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의 지지를 사회균열로 설명가능한 확률은 각각 0.33, 0.29, 그리고 0.76이다. 모두 상당히 높은 확률을 나타냈지만, 특히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가 사회의 균열구조를 대폭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의 지지에 대한 분석을 상세히 살펴보면,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확률은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일수록, 그리고 호남에 거주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확률은 연령이 높을수록, 보수적일수록, 그리고 영남에 거주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이 반영하지 않는 독특한 사회균열구조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데, 민주노동당에 대한

〈표 2-6〉 사회균열과 정당지지: 프로빗 분석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성 별	0.03 (0.33)	0.06 (0.58)	-0.40** (-3.03)
연 령	-0.01* (-2.09)	0.16** (3.65)	-0.015** (-2.44)
학 력	-0.07 (-0.92)	0.01 (0.11)	0.14 (1.27)
소 득	-0.03 (-0.93)	-0.004 (-0.13)	0.01 (0.29)
이 념	-0.06 (-2.13)*	0.06** (2.30)	-0.06* (-1.92)
계층의식	0.10 (1.40)	0.07 (1.10)	-0.16 (-1.78)
국민정체	-0.12 (-0.10)	0.18 (1.62)	0.35 (2.47)**
도 농	0.08 (1.05)	0.02 (0.25)	-0.02 (-0.20)
서울경기	0.19 (1.17)	0.24 (1.84)	0.46 (1.92)
호 남	0.41 (2.21)*		0.67 (2.40)**
영 남	-0.15 (-0.89)	0.76 (5.74)**	0.39 (1.53)
P	0.33	0.29	0.76

* $p < 0.05$, ** $p < 0.01$.

지지확률은 남성일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일수록, 호남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국가정체성이 약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국가정체성의 강약은 '대한민국'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정도로 측정하였는데, 민주노동당 지지자들 가운데에는 국가정체성이 약한, 즉, 대한민국에 대해 가깝게 느끼지 않는 응답자들의 비율이 높은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약간의 예외를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한국 정당체계는 사회균열 중 세대균열, 이념균열, 그리고 지역균열의 다층적 균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사회에서 현안이 되는 구체적 정책현안에 대한 입장의 차

이는 어떠한 사회균열을 반영하는지, 그리고 정당에 대한 지지와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살펴보자.

과거사처리에 대한 입장은 진상규명 및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부터 과거사에 더 이상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까지

〈표 2-7〉 정책균열과 사회균열 및 정당균열: 프로빗 분석

		과거사	성장-분배	국가보안법	통 일
사회 균열	성 별	0.13 (1.69)	-0.02 (-0.33)	0.04 (0.61)	0.08 (1.41)
	연 령	0.01** (3.34)	0.01** (2.89)	0.01** (2.52)	-0.08** (-3.10)
	학 력	-0.09 (-1.49)	-0.02 (-0.35)	-0.03 (-0.62)	-0.05 (-1.28)
	소 득	0.04 (1.86)	0.03 (1.60)	0.01 (0.71)	0.04** (2.44)
	이 념	0.06** (2.80)	0.01 (0.89)	0.06** (4.26)	0.05** (3.49)
	계층인식	-0.73 (-1.30)	-0.06 (-1.48)	-0.03 (-0.65)	0.06 (1.45)
	국가정체성	0.01 (0.08)	0.01 (0.07)	-0.15* (-2.15)	0.22** (3.42)
	도시-농촌	0.25 (0.41)	0.24 (0.52)	0.07 (1.51)	0.04 (0.95)
	영 남	-0.02 (-0.18)	0.06 (0.82)	-0.01 (-0.12)	0.01 (0.09)
	호 남	-0.37 (-2.77)**	-0.25** (-2.43)	-0.45 (-4.66)**	-0.24 (-2.58)**
	충청, 강원, 제주	0.43 (3.50)**	0.22 (2.33)**	0.27 (2.96)**	0.11 (1.30)
	R ²	0.09	0.05	0.10	0.06
정당 균열	열린우리	-0.29** (-2.72)	-0.12 (-1.53)	-0.21** (-2.74)	-0.14* (-1.95)
	한나라	0.30** (3.32)	0.11 (1.56)	0.29** (4.38)	0.04 (0.59)
	민주노동	-0.51 (-3.72)**	-1.60 (-1.52)	-0.29 (-2.89)**	-0.23 (-2.42)**
	R ²	0.04	0.01	0.05	0.01

주: 지역은 더미변수로 전환하였으므로 경기, 영남, 호남, 충청·강원·제주의 4 지역 중 회귀분석에서는 1지역을 제외한 3 지역에 대해 회귀하게 되는데, 호남과 충청·강원·제주의 정책성향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여기서는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 3 지역에 대해서 회귀하였음.

* $p < 0.05$, ** $p < 0.01$.

4단계로 측정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진보적일수록 엄정한 처리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일수록, 그리고 과거의 지배이념과 다른 이념을 가지고 있을수록 과거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다. 또 지역적으로는 호남지역 거주민이 엄정한 처리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충청·강원·제주지역 주민이 관용적 처리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의 지역균열이 단순한 감정적 균열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정책선호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거사처리에 대한 입장과 정당지지와의 관계를 보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지지자들은 엄정한 처리를 원하는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관용적 처리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과거사의 처리문제는 정당간 균열이 확연하게 반영된 정책이슈이며, 이에 따라 정책지지의 사회균열구조와 정당지지의 사회균열구조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은 '철폐', '새로운 법으로 대체', '부분적 수정' 그리고 '유지'의 4단계로 측정했는데, 이 역시 아주 강하게 정당화가 이루어진 정책이슈로 드러났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은 국가보안법에 대해 부정적 경향이 있는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긍정적 입장을 강하게 보여준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정책균열 역시 정당균열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 이념성향, 그리고 거주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진보적일수록 국가보안법의 철폐 내지는 수정보완을 원하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보수적일수록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호남거주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 부정적 태도가 강한 반면, 충청·강원·제주지역 거주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긍정적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정당지지자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우리의 정당균열이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을 거의 반영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경제정책에 대한 입장은 소득이나 계층인식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 사회균열을 반영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단 경제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이슈나 정당지지에서도 소득이나 계층의식이 거의 반영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인데, 이는 심리적 차원에서는 경제적 균열이 중요하지만, 서구의 여러 나라와 달리 정책적 균열, 그리고 정당균열로 전환되지는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시도하는 양극화의 정치쟁점화 노력이 경제적 측면의 사회균열을 정치화시키는 데 성공할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분배나 성장이나는 입장의 차이와 사회균열의 관계를 보면, 연령과 호남 및 충청, 강원, 제주지역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성장, 연령이 낮을수록 분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호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분배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충청·강원·제주는 성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도 흥미롭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정당지지가 통일안보정책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균열구조인 이념성향이 성장이나 분배나 문제에서는 의미 있는 균열구조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의 이념성향이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등에 대한 입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이념성향이 서구와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압축성장과 남북대치라는 우리의 독특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데, 압축성장과 남북대치가 완화된 상황에서 이념성향이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재편될 것인지의 여부가 주목된다.

통일에 대한 입장은 '빨리 통일해야 한다'에서부터 '굳이 통일할 필요가 없다'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측정했는데, 연령, 소득, 이념, 국가정체성, 그리고 지역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가진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통일에 대해 적극적 입장을 드러낸다. 분단시기가 길어질수록 통일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한편, 이념성향의 측면에서 보면, 진보적일수록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반면, 보수적일수록 통일에 대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에 대한 지지나 주요정책에 대한 지지에서 젊은 세대와 진보주의자, 그리고 구세대와 보수주의자가 입장을 같이 했지만, 통일문제에서는 진보주의자들과 구세대, 그리고 보수주의자들과 젊은 세대가 유사한 입장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통일문제가 제기되면 젊은 세대와 진보주의가 취해온 공동입장에 균열이 생길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정체성이 강할수록 통일에 적극적인 반면, 국가정체성이 낮을수록 통일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통일을 제3의, 중립적 체제로의 통일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통일을 전제로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다른 정책이슈와 달리 소득수준이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나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통일에 적극적인 반면, 소득이 높을수록 통일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호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 통일에 적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에 대한 입장은 경제문제에 비해서는 정당화가 이루어져 있지만, 국가보안법이나 과거사처리에 대한 입장에 비해서는 정당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자들이 가장 통일에 적극적이며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이 그 뒤를 따르지만, 회귀분석의 R^2 나 각 상관계수의 신뢰수준은 국가보안법이나 과거사처리에 대한 회귀분석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당들이 국가보안법이나 과거사 처리문

제는 적극적으로 이슈화했던 것에 반해, 통일문제는 그렇지 않았던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

한 사회의 갈등수준과 민주주의의 안정성, 그리고 정치균열 및 정당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집단정체성의 충돌이 만들어내는 사회균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 사회균열축은 빈부, 노사,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와 같은 경제적 균열축으로 드러났으며, 학력, 세대, 이념균열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한편, 우리사회의 전통적 균열축이었던 지역, 도농, 민군의 균열은 그다지 중요하게 느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느끼는 사회균열축이 곧 세계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각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정당과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사회구조의 균열축은 아니다. 이 글에서는 세계관 및 의식과 관련된 집단정체성으로 국가정체성, 계층의식, 그리고 이념성향을 상정하고, 세계관 및 의식균열과 전통적 사회균열의 관계를 보았는데, 국가정체성은 거주지구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에 거주할수록 국가정체성이 강한 반면, 도시에 거주할수록 국가정체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층의식은 성별, 연령, 학력, 소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많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계층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은 연령과 소득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의 소득수준을 가진 집단은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지만, 중산층이 중하위층에 비해

진보성향을 드러내는 까닭이다.

세계관과 관련된 집단정체성의 상호관계를 보면, 국가정체성, 이념성향, 그리고 계층의식이 서로 중첩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계층인식과 이념성향이 상당히 교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사회의 이념성향이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동시에, 본격적인 계층정치가 등장하지 못한 이유를 짐작하게 한다.

전통적 사회균열과 세계관 균열을 망라한 전체 사회균열축 중 정당지지에 영향을 주는 균열축은 연령, 이념, 그리고 지역이다.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는 연령이 낮고 진보적이며 호남에서 높은 반면, 한나라당은 연령이 높고 보수적이며 영남에서 지지가 높은 경향이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연령이 낮고 진보적이며 호남에서 지지가 높다는 점에서 열린우리당과 지지기반이 상당히 겹치는 듯이 보이지만, 남성과 국가정체성이 약한 이들 가운데에서 지지율이 높다는 점에서 특이성을 보인다.

정책에 대한 지지와 정당균열 및 사회균열의 관계를 보면, 과거사처리와 국가보안법 문제는 정당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이슈여서 정당지지에 따라 입장이 명확히 차이가 난다. 열린우리당 지지자와 민주노동당 지지자들이 과거사의 엄정한 처리와 국가보안법의 철폐 및 수정에 적극적인 반면,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과거사의 관용과 국가보안법의 유지를 선호하는 입장을 보인다. 과거사처리 및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과 사회균열의 관계를 보면, 연령, 이념, 지역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연령이 낮고, 진보적이고 호남지역에 거주할수록 과거사의 엄정한 처리와 국가보안법의 철폐에 적극적이다. 정책균열과 정당균열이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장이나 분배나 같은 경제문제에서는 정당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정당지지에 따라 입장의 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는다. 또한 사회균열과의 관계를 보아도 연령에 따른 입장차이는 명확하지만

이념에 따른 입장차이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등 기존의 정책균열과는 차이가 있다.

결국 과거사처리,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등과 관련된 문제에서는 정당지지자별 입장차이가 명확할 뿐 아니라 정당균열과 정책균열이 거의 일치하지만, 경제 등 그 밖의 이슈에 있어서는 정당지지자간 입장차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뚜렷한 정책균열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은 것이다. 그동안 경제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당들이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정당간 정책차이가 뚜렷이 구별되지 않았던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러나 양극화의 심화로 규정하든지 신빈곤층의 양산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압축성장이 끝나고 분배구조가 악화되는 객관적 상황과 더불어 심리적 차원에서 빈부거리감의 확대되고 있는 것은 정치엘리트에게는 정치시장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새로운 마케팅전략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으로 보인다. 정치엘리트들이 재빠르게 정치시장의 변화에 맞춰 정치전략을 수정할 것인지, 그리고 정치전략의 변화가 정치균열의 구조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정당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볼 시점이다.